

칠레 문민정부의 과거사 정리

2005년 12월

목 차

I. 군부정권의 인권탄압과 군부우위 헌법체제 구축	1
1. 군사 쿠데타와 인권탄압	
2. 사면법 제정	
3. 1980년 군부우위 헌법개정	
II. 문민정부의 과거사 정리 노력	4
Aylwin 정부 (1990-1994)	4
1. 정부의 인권유린문제 해결 노력과 한계	
2.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3.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반응 및 평가	
Frei 정부 (1994-2000)	11
1. 정부, 여당연합과 군부와의 관계	
2. 피노체트 영국 구금사건과 사면법의 약화	
3. 민-군 대화협의체 설치	
Lagos 정부 (2000-2006)	15
1.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	
2. 과거사 정리를 위한 Lagos 대통령의 제안	
3.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4. 칠레 육군의 사과 성명 발표	
5. 정치구금 및 고문 진상조사 결과 발표	
6.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반응 및 평가	
III. 칠레 과거사 정리의 주요 특징	26

I. 군부정권의 인권탄압과 군부우위 헌법체제 구축

1. 군사 쿠데타와 인권탄압

피노체트(Pinochet) 육군사령관은 1973.9.11 군사쿠데타를 주도, 아옌데(Allende) 좌파연립 정부를 붕괴시키고 전권을 장악하였다. 피노체트 장군은 반대세력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국가정보국(DINA)을 설립하여 아옌데 정부 지지세력 소탕작전을 개시하였다. 군사정부는 군경을 동원하여 좌익세력을 불법 체포, 구금, 고문, 처형 및 추방 등 무자비한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였다.

군부의 인권유린행위는 쿠데타 발발이후 4개월간(1973.9-12)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군부의 인권유린에 의한 사망 또는 실종자수는 1973~1990년간 총 2,27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973년도 피해자수만 전체의 55.33%에 해당하는 1,261명으로 집계되었다.¹⁾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당한 건수는 1973-1990년간 총 27,255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973년도 피해자수는 전체의 67.38%에 달하는 22,824명으로 집계되었다.²⁾ 군부는 쿠데타직후 육군과 경찰을 동원, 아옌데 정부 지지세력인 사회당, 공산당 등 좌익세력을 체포, 고문 및 처형을 하였는데, 사망 또는 실종된 2,279명중 52%가 좌익정당 소속이었으며 46%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들이었다.

군부가 쿠데타 거사후 발생한 사회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반대세력의 억압을 위해 1973.11월 창설한 국가정보국(DINA)은 육군대령들이 주동이 되어 육군장교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정치탄압 및 인권유린을 주도한 정보기관으로 국내외에 악명을 떨쳤다. 유엔이 1977.12월 칠레의 정치적 억압과 인권유린을 4번째로 규탄하자, 군부정권은 1978.3.10 DINA를 해체시키고 국가중앙정보부(CNI)를 설립하였으나 CNI는 1978년부터 1990.3월 민정이양시까지 인권유린행위를 계속하였다.

1) 1990.4 설립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 의 조사결과임.

2) 2000.11 설립된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 의 조사결과임.

피노체트는 이와 같은 정치탄압을 통해 군사 독재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모든 정당을 폐지하고 인권 및 시민권을 제한하였다. 사회의 기득권 계층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국민의 약 32%)은 군사쿠데타를 아예 정권이 표방코자 하였던 마르크스주의에서 해방시킨 행위로 규정하고 환영하였던 반면, 칠레 국민의 대다수(약 52%)는 쿠데타를 민주헌정을 중단시킨 행위로 규탄하였다.

2. 사면법 제정

피노체트 정권은 자신들이 자행한 인권탄압으로 인해 향후 사법처리 될 것을 우려하여 법적 보호장치를 고안해 내었다. 1978.4.19 발효된 사면법에 따르면 1973.9.11~1978.3.10기간을 계엄령이 선포된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동 기간중 발생한 모든 범죄(정치 및 일반 범죄 불문)를 행한 자들(당사자, 공모자 및 은닉자 포함)로서 사면법 공포시점까지 기소되지 않았거나 판결받지 않은 모든 범법자들의 형사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면법이 발효된 이후 대부분의 민간법원들은 인권유린사건을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군사법원으로 이첩하였으며, 군사법원은 상기 기간중 발생한 인권유린사건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도 해보지 않고 사면법을 적용하였다.

3. 1980년 군부우위 헌법개정

군부정권은 1980년 헌법을 개정하여 군부우위의 헌법체제를 구축하였다.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육·해·공군 및 경찰사령관 해임권을 삭제하고 사령관의 임기를 4년간 보장하였다.

둘째,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를 설립하여 국가안보사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대통령, 상원의장, 대법원장, 4군사령관으로 구성하여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정운영에서 군부가 영향력을 발휘토록 하였다.

셋째, 9명의 임명직 상원의원을 신설하여 상원내 우익세력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대통령이 2명, 대법원이 3명을 지명하고 NSC가 4명의 전직 3군 및 경찰사령관들을 상원의원으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정치계에서 군부우위의 안전판을 마련하였다.

넷째, 6년이상 재임한 전직 대통령을 종신직 상원의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피노체트가 상원의 우익세력을 총 지휘하도록 준비하였다.

다섯째, 헌법은 군부의 최소 예산범위를 규정하고 칠레 최대 국영기업인 구리공사(Codelco)의 구리수출 이익금중 10%를 매년 군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칠레군부는 이와 같이 쿠데타 이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1990년 민정이양시까지 17년간 군사독재를 실시하였다. 법적·제도적으로 군부우위의 장치를 준비한 과정을 보면 군부 단독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군부를 지지했던 우익 민간인들이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³⁾ 따라서 1990년 군정이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지만 문민정부는 기존의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친군부 우익야당이 기존의 제도적 틀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부정권이 정치적 행위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 규범 및 절차들이 이미 독자적으로 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우익정당인 독립민주연맹(UDI)을 창립한 학생조합운동 지도자들(Jaime Guzman 등)이 1980년 헌법개정에 참여, 보호 민주주의(Protected Democracy)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의 특이한 선거제도 및 임명직 상원의원제를 고안해 내었음.

II. 문민정부의 과거사 정리 노력

Aylwin 정부 (1990-1994)

1. 정부의 인권유린문제 해결 노력과 한계

피노체트 군부정권은 1980년 헌법개정시 8년후인 1988년 국민투표를 통해 집권 8년 연장여부를 묻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치일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군부정권 반대재야세력의 집요한 부결운동의 성공으로 1989.12월 총선이 실시되어 군정이 종식되고 민정이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야권의 17개 정당연합(Concertación) 대표인 Patricio Aylwin 대선후보는 문민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90.3.11 취임하였다. 엘윈 대통령은 4년간의 재임기간동안 군부에 대한 문민우위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달성코자 노력하였으나, 군부우위의 체제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엘윈 대통령은 문민우위의 원칙을 추구해 나가면서 이로 인한 군부와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정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익야당 및 군부측과의 비공식적인 대화 및 타협이라는 정치전략을 가지고 대처해 나갔다.⁴⁾

엘윈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군부정권이 기소했던 정치범 47명을 사면하고 다음날 대중집회에서 과거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한 선거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4.25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다.

4) Fuentes, Claudio A, “After Pinochet : Civilian policies toward the military in the 1990s Chilean democracy” (1999, Univ.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참조

동 위원회가 설립되자 군부와 우익야당세력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문민정부와 군부간 관계가 긴장되기 시작하였다. 피노체트 군 총사령관은 군 대표를 Rettig 위원장에게 보내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어 칠레 군부 전체, 특히 육군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사법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엘윈 대통령은 이러한 군부의 행위를 대통령 권위에 대한 간접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피노체트 총사령관을 대통령궁으로 불러 문민정치영역에 대한 군부의 침해사건을 해명토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노체트는 문민정부의 진상조사에 대해 협조를 약속하였으며, 대통령은 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시행하나 사법처리권은 없다는 점과 조사결과 파악될 인권유린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전달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당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칠레 국민의 80%가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설립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문민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인권유린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일은 매우 지난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사법부가 군부정권 기간내내 군부측의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유지하였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처음 수년간 사법부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군부정권이 고안한 1978년의 사면법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둘째, 사법부의 수동적 자세 이면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즉, 피노체트는 친 군부성향의 법관들을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 민정이양이후에도 인권유린행위가 문제화되지 않도록 조치해 놓았었다. 민정이양이후에도 헌법 규정에 따라 피노체트가 1997년까지 군 총사령관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상황이 군부측에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피노체트는 88년 국민투표에 패한 이후에도 16명의 대법관들에게 조기은퇴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의하여 6명의 대법관을 교체하는 등 향후 대책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였었다.

군부측의 치밀한 준비와 대응전략으로 인해 문민정부는 인권유린 문제를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엘윈 대통령으로는 과거사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이로 인해 군부와 정면 충돌함으로써 모처럼 회복된 민주주의 질서의 안정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엘윈 대통령은 인접국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사례를 잘 알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군정 종식 및 민정이양후 라울 알폰신(Raul Alfonsin) 대통령(1983-89)시절 법원이 군부정권시의 인권유린관련 군 대령들을 소환하자 영관급 장교들이 주동이 된 군반란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알폰신 대통령은 사면법안을 의회에 제출, 통과시킴으로써 사태를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 우루과이 민정이양 직후인 호세 마리아 상기네티(Jose Maria Sanguinetti) 대통령(1985-90) 시절 군수뇌부 인사들이 법원의 소환명령에 불응,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군부측 항의를 전달하자 대통령은 사면법안을 의회에 제출, 통과시키고 추가로 국민투표에 부쳐 추인을 받음으로써 헌정중단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인접국의 정치적 소요사태를 역사의 교훈으로 파악하고 있던 엘윈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인권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민정이양은 되었으나 군부우위의 헌법체제하에서 피노체트 장군이 군 총사령관으로 계속 재임하면서 군부인사 누구라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등 당시 칠레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미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엘윈 대통령은 인권유린에 관련된 군부인사에 대해 사법적 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1990.4.25 앨윈 대통령은 과거 Radical당 상원의원 출신인 라울 레티그(Raul Rettig)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Truth and Reconciliation)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일명 ‘Rettig Commission’이라고도 불리우며, 위원들은 전원 법률전문가들로 피노체트 지지 및 반대인사들로 구성되었다.

‘Rettig 위원회’는 4개 주요 임무를 부여받아 9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하였다. 첫째, 피노체트 군부정권하 자행된 인권유린 실태를 가능한 한 철저히 조사하고, 둘째, 피해자 파악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며, 셋째, 보상방안을 건의하고, 넷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건의하는 것 등이었다. 문민정부는 군부정권시 자행된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the most serious human right violations), 즉, ‘불법처형’, ‘체포후의 실종’, ‘고문 등 정치폭력으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만을 조사, 발표토록 하였다. 고문, 불법구금, 추방관련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위원회에 어떠한 종류의 사법처리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 및 인권 단체들은 위원회의 제한된 조사활동을 비판하였으나 민정이양후에도 군부의 힘이 건재한 상황에서 Rettig 위원회의 활동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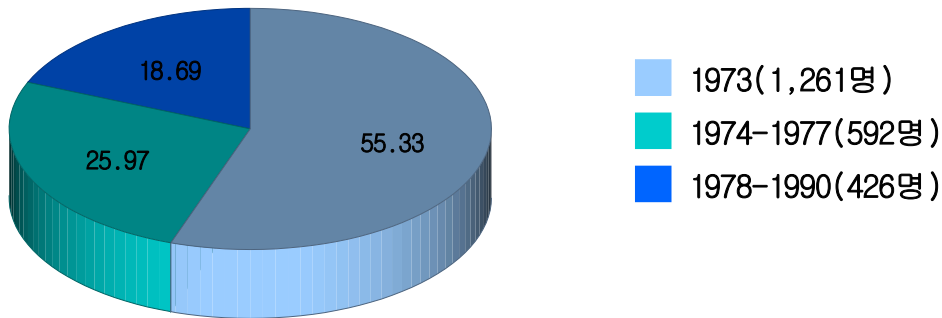
‘Rettig 위원회’에는 60명의 직원들이 조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NGO들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였다. 위원회는 전국을 자유로이 방문하고 피해자 인터뷰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군부의 협력은 거의 받지 못하였다.

동 위원회는 총 3,550건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중 2,296건을 인정하고 총 건수의 95%가 군부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⁵⁾

5) 전체 희생자 2,279명중 인권유린 희생자 2,115명, 정치폭력 희생자 164명, 남자가 2,153명(94.5%), 여자가 126명(5.5%), 희생자중 21세~35세가 59.4%를 차지

위원회는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6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군부의 비협조로 인해 수많은 실종자들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연도별 희생자 비율 (%)



* 전체 희생자수 : 2,279명

‘Rettig 위원회’는 1991.2.8 1,300페이지 분량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엘윈 대통령은 한달후 대국민 TV중계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칠레사회를 대신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를 구하였다. ‘Rettig 보고서’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희생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의미하는 도덕적·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건의하였다.

보고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교육, 의료 및 주택관련 혜택을 부여하며 실종자 행방파악 조치 및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였다.

‘Rettig 보고서’ 발표이후 여당연립정당(Concertación)은 보고서의 건의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인권관련 헌법 및 법률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보상 및 법률개정과 아울러 실종자 행방파악관련 법을 제정하였으나 여타 건의사항들은 흐지부지되었다. Rettig 보고서의 이행기구로서 “국가 보상 및 화해 공사”(National Corporation for Reparation and Reconciliation)가 1992.1월에 설립되어 2년간 활동하였으며 인권 옴부즈맨(human rights ombudsman)이 설치되었다.

‘Rettig 위원회’의 조사결과 희생자들을 위한 중요한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실종자’ 가족들이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법적 제한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러한 제한조치가 해제되었다.

약 5,000명정도의 사망 또는 실종자 가족들이 매년 약 5,000미불 상당의 월 연금을 받게 되었다. 불법구금 및 고문 피해자들은 훨씬 숫자가 많았으나 금번 진상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Rettig 보고서 발표와 엘윈 대통령의 사과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과거사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다.

3.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반응 및 평가

엘윈 대통령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언론매체에서는 보고서관련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고 보수 및 온건 노선의 정치지도자들은 과거의 참상에 대해 참회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육군 및 해군측은 보고서가 편견에 차 있으며 온전치 못하다고 비난한 반면 공군 및 경찰측은 보고서의 결론을 인정하는 등 정치계 및 군부내의 반응이 서로 상이하였다. 국민화합과 교육 등에 중점을 둔 후속계획들도 수립되었고 의회는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발표후 한달이 되는 4월 1일에 1980년 헌법개정의 장본인이며 우익정당 독립민주연합(UDI)의 창설자로서 대표적 우익정치인인 하이메 구스만(Jaime Guzman) 상원의원이 보고서가 역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피상적이고, 왜곡적이며 허구적이라고 혹평한 후 극좌무장단체(FPMR)에 의해 총격 피살당하는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Rettig 보고서’에 관한 국민적 토론은 끝나게 되었으며 국민화합을 위한 분위기는 냉각되었다.

‘Rettig 보고서’는 인권유린을 자행한 군인들을 사법처리할 수는 없었으나 그동안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내란의 위기에서 구원하였다고 자랑하던 군부가 그들의 어두운 과거를 변호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수세적 상황으로 몰아세웠다는 점에서 군부에게 준 충격은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고서의 발표로 군부가 그동안 역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던 상황은 끝나게 되었다.

‘Rettig 보고서’ 발표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 정치문화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조사결과 보고서가 국민화합을 증진시키지는 않았으며, 좌우의 세력간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 당시 일반여론의 평가였다.

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었던 1990.4-5월 당시 여론조사결과 71%가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국민간 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고 24%가 분열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았으나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1990.12월 여론조사에서는 45%가 국민간 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반면, 48%는 과거 상처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 위원회의 진상조사 발표에 관한 여론조사(1990.12.)**

	18-25	26-40	41-60	61세이상	우익	중도	좌익	총계
국민화합에 유용	42	46	45	46	27	44	63	45
과거상처심화	50	47	48	46	64	50	32	48
무응답	8	7	7	8	9	6	5	8

출처 : BAROMETRO CERC, 산티아고

Frei 정부 (1994-2000)

1. 정부, 여당연합과 군부와의 관계

첫 문민정부인 엘윈 정부는 인권유린 문제해결에 정치적 비중을 두었으며 군부에 대한 문민우위원칙을 확립시키고자 군부측과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문민정부인 프레이(Frei) 정부에서는 군부와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가급적 삼가하고 군 현대화, 국방정책 개발 등 실무적 문제에 치중하면서 군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엘윈, 프레이 대통령 모두 동일한 여당연합(Concertación)내 기민당(DC) 소속이었으나 엘윈 및 핵심 보좌진들이 기민당의 구세대 원로 정치인들이었던데 반해, 프레이 및 보좌진들은 신세대 정치인들로서 인권 및 헌법개정 등 군부측과 대립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정치문제보다 교육, 의료보험, 인프라 건설, 외교강화 등 분야에서의 국가현대화 프로젝트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

프레이 정부가 인권유린 등 군부와 연관된 정치적 문제를 다룬 경우는 피노체트 영국구금 등 외부 정치적 사건의 발생에 따른 것이었다.

첫째, 군부정권 집권초반(1973-1977) 악명높았던 국가정보국(DINA) 책임자 마누엘 콘트레라스(Manuel Contreras) 전 육군대령과 부책임자 페드로 에스피노사(Pedro Espinoza) 전 대령이 1976년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올란도 레텔리에르(Orlando Letelier) 전 아옌데정부 외교장관 폭탄테러사건의 주모자로 기소되어 1995.5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7년 및 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발표된 후 수백명의 군장교들이 사복차림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기 군선배들을 방문함으로써 정부측에 무언의 경고메세지를 전달하였다. 대법원은 사면법에 의거, 군부정권의 인권유린 범죄관련 수천건의 기소들을 기각하였으나 콘트레라스와 에스피노사의 기소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레텔리에르 살해사건만 해결하였다.

프레이 정부는 1995.8. 군부측의 인권문제 종결요구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군부의 특권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인권문제 계류재판의 신속 처리, 대통령의 군고위장성 해임권 부활, NSC 구성원 변경(하원의장 추가), NSC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삭제 등에 관한 법률안들을 상정하였으나 우익 야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둘째, 피노체트 장군은 1998.3월 82세의 나이에 군 총사령관에서 은퇴하고 헌법에 따라 종신직 상원의원에 취임할 예정이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연합내 의견이 양분되었으며 민주당 및 사회당측은 헌법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지적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서 피노체트의 탄핵안을 제출하였으나 여소야대의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프레이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 피노체트의 상원의원 임명을 문민정부와 군부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 피노체트 영국 구금사건과 사면법의 약화

프레이 정부가 인권유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의 중단하게 되었을 무렵 발생한 피노체트의 영국구금사건은 칠레내의 인권유린문제 해결노력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전기가 되었다.

1998.10.16 런던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입원중이던 피노체트는 70년대 남미군사 정권들의 반대세력 합동소탕작전(일명 “Condor Operation”)시 스페인 국적 인사들의 실종과 관련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스페인 발타살 가르손(Baltasar Garzon) 판사의 신청으로 영국에서 구금되게 되었다.

피노체트의 영국 구금은 군부정권시 자행된 인권유린의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건이었다. 칠레의 인권유린 희생자 가족 약 3천명은 집회를 갖고 피노체트의 체포를 도덕의 승리이며 상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환영하면서 피노체트의 본국 송환 및 재판, 사면법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칠레 군부와 우익야당은 구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시 영국정부에 석방교섭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군부가 피노체트를 적극 변호한 것은 연로한 82세의 전 군총사령관에 대한 충성심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일 피노체트가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수많은 군 고위인사들도 처벌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군부는 이로 인해 1973년 쿠데타 이래 향유해 오고 있는 군부의 특권적 지위를 상실할 것을 우려하였다.

한편, 프레이 정부도 1998.10.16에서 2000.3.2까지 17개월간 (503일)의 구금기간내내 피노체트의 영국구금은 외교관 여권소지자의 면책특권과 칠레의 주권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피노체트에 대한 외국법원의 사법처리 권한을 인정치 않고 칠레법원이 동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노체트의 본국송환을 위해 노력하였다.

해외에서의 피노체트 구금 및 기소는 칠레내에서의 법적·정치적 상황을 바꾸어 놓았으며 언론에서는 인권에 대한 새롭고 진솔한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피노체트의 구금기간이 길어지고 군부정권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비등해지자 1999.12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우익정치인들중 누구도 피노체트를 적극 변호하는 자가 없게 되었으며, 우익야당연합의 대선후보 호아킨 라빈(Joaquin Lavin)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노체트와 거리를 두었고 심지어 육군조차도 피노체트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표명을 자제하였다.

프레이 정부는 영국정부를 설득하여 피노체트를 귀국시키려는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피노체트를 국내법정에 소환하여 처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피노체트 장군이 구금되면서 인권유린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피노체트가 자신과 군부를 위해 설치해 두었던 기소면제 장치들이 하나씩 무너져 갔으며 사면법의 적용은 1999년 정지되었다. 2000.3월 피노체트가 칠레에 송환되기까지 프레이 정부하에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 대법원에 남아있던 친 피노체트 대법관들의 수는 줄어 소수가 되었으며 희생자 가족들의 청원에 따라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민-군 대화협의체 설립

피노체트의 영국구금은 군부정권시의 실종자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실종자 가족협회의 압력으로 프레이 정부는 1999.8.21 저명한 인권변호사 4명, 군부대표 4명, 문화·종교계 인사 10명 등으로 구성된 ‘민-군 대화협의체’ (Roundtable Dialogue)를 설치하였다. 정당대표, 은퇴 군인 및 실종자 가족협회 대표들은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은 동 기구의 설치 목적을 피노체트 칠레송환을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동 협의체 설치가 법원의 인권유린사건 해결 노력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였다.

‘대화협의체’는 9개월간 22차례 회의를 갖고 실종자 행방과악 방안 건의 및 인권유린이 발생한 역사적 상황의 규정 등을 목적으로 활동 후 2000.6월 ‘인권관련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화협의체’는 칠레가 60년대부터 정치행위자들이 야기시킨 정치 폭력에 의해 시달려왔고 이러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1973.9.11 최절정에 달하여 이 와중에 인권유린이 발생하였으며 군부정권기간동안 국가기관이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동 보고서 발표후 칠레 군부는 인권유린에 가담하였음을 처음으로 공식시인하여 사회각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화협의체’가 성명을 발표한 후 6개월이 지난 2001.1.7 리카르도 라고스 (Ricardo Lagos) 대통령은 대화협의체가 파악한 총 실종건수 1,243건중에서 구금중 실종된 약 200명의 행방이 파악되었으며 신원이 파악된 약 180건중 130명은 바다, 강, 호수에 던져졌으며 약 20명은 산티아고 근교 묘지에 묻혀있는 유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관련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

Lagos 정부 (2000-2006)

1.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

여당연합(Concertación)의 대선후보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는 2000.3.11 6년 임기의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3.3 영국구금에서 석방된 피노체트의 귀국으로 인해 취임초부터 피노체트의 사법처리와 인권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다. 피노체트는 귀국 당시 1998년 유럽으로 출국한 이후부터 피해자 가족, 인권단체, 노조, 정당들에 의해 70건이상의 사건에 피소되어 있었다. 국내 정치·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인해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2000.5.23 찬성 13, 반대 9의 표결로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8 대법원도 찬성 14, 반대 6의 표결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사법부의 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결정은 과거에는 상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군부정권하에서 인권수호에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법부는 금번 결정을 통해 독립성을 과시하였다. 사법부의 극적인 결정으로 인해 피노체트가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라고스 정부와 군부세력간 긴장이 조성되었다. 군부지지 우익야당세력은 정부가 인권유린관련 형사 소추에 개입하여 사면법을 적용토록 요청하였으나 라고스 대통령은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원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면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권관련 사법심사에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측과 군부의 압력을 일축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과거 인권유린문제에 관해 어떠한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사법처리절차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피노체트에 대한 대법원의 면책특권 박탈로 인해 피노체트를 기소와 유죄선고로부터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인도적 고려였다.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2001.7.9 피노체트의 고령으로 인한 치매를 재판 불가사유로 들어 형사소송 심리를 정지시켰다. 며칠후 피노체트는 종신직 상원의원 포기와 모든 공직으로부터의 은퇴를 발표하였다.⁶⁾

6) 대법원의 종신직 상원의원 박탈결정관련, 칠레국민의 61% 찬성, 29% 반대표명

2. 과거사 정리를 위한 Lagos 대통령의 제안

가. 제안내용

아옌데 대통령이후 최초의 사회당 출신 라고스 대통령은 군사쿠데타 발생 30주년을 한달 앞둔 2003.8.12 대국민 TV연설을 통해 “과거없이 미래는 없다”(There is no Future without a Past)는 점을 강조하고 과거 군부정권시의 인권유린문제와 관련 신속한 사법처리 협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법적 개혁 등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신속한 사법처리 협력

첫째, 사법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순회판사 또는 인권전담판사를 임명한다.

둘째, 사법부의 사건조사 및 정보파악을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인권유린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자들 중에서 실종자 또는 사망자의 행방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법원에 제공하는 자에게 형사면책을 부여한다.

- 유죄판결 받은 자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자의 형을 감형시킨다.
- 군대의 비밀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인권 단체에게 사망·실종 사건조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1973.9.11-1990.3.10간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관련, 군사법원에서 심리중인 모든 사안을 30일내에 민간법원으로 이관한다.

셋째, 사법처리를 위한 정부의 협조와 관련, 수사경찰로 하여금 판사를 돕도록 하고 희생자의 신원확인방법과 절차의 개선을 위해 법의학 서비스(Legal Medical Service)관련 전문가를 지원한다.

피해자 보상제도 개선

첫째, 현재의 연금을 50% 인상하고 현 법률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키 위한 특별기금을 설립한다.

둘째, 피해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대상 범위를 대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셋째, 피해자 가족의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넷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다섯째,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불법구금 및 고문 피해자 명단을 파악할 위원회를 설립한다.

여섯째, 정치적 구금 및 기소자들의 형사기록 말소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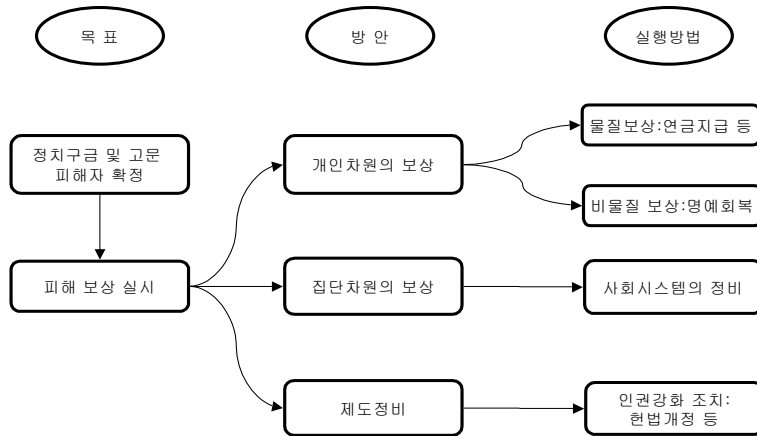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법적 개혁

첫째, 인권관련 국제협정들을 비준한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군 형법규정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정한다.

둘째, 인권관련 학교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국가인권기관(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Public Liberties)을 설립하여 인권문제를 총괄토록 한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라고스 대통령의 제안



나. 평 가

라고스 정부는 인권문제 전담 특별판사의 임명을 제안하여 인권 유린관련 과거사 조사의 속도 및 효과면에서 공헌하였다고 평가된다. 대통령의 제안중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불법 구금 및 고문 피해자 명단을 파악할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동 위원회는 엘윈 정부하의 ‘Rettig 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그동안 다루어오지 않았던 불법구금 및 고문피해자 문제를 다루겠다는 라고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13년전 문민정부 출범이후 고문피해관련 최초의 공식적인 조치이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조치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계류중인 인권유린사건의 관할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시키는 정책으로 장기 미결사건에 대한 재판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라고스 대통령은 법원에 자발적으로 실종자 또는 사망자의 행방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형사면책을 부여하자고 제안하였다. 칠레정부는 고문, 살해, 실종 등 반인류적 범죄에 직접 가담한 자에게는 그러한 형사면책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인권단체들은 인권유린과 관련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라고스 대통령은 인권유린 관련자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감형을 해주자고 제안하였다. 인권단체들도 30년전 발생한 인권유린사건 조사가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사를 촉진시키려는 대통령의 제안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용적 조치와 처벌수위의 약화 조치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형사면책의 경우 두려움과 무지에서 상부명령에 복종한 사람들도 심각한 인권유린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는 명령에의 복종은 방어논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Nurenborg 재판 등에서 보듯이 국제법적으로 이미 잘 확립되어 있다.

기소면제, 형사면책을 부여하는 조치는 절박한 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의 위협하에서 인권유린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도록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정권하에서 자행한 인권유린 범죄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고 오랫동안 복역한 사람들을 정보제공을 이유로 감형시키고 석방을 고려하자는 정부의 제안은 의회에서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선고 받은 사람들은 석방을 고려할만한 절박한 인도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형기를 만료토록 해야 하며 사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자행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3.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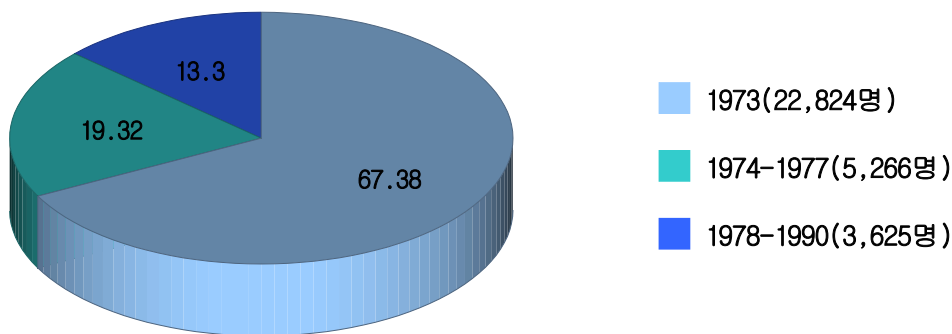
라고스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에 따라 2003.11월 인권분야에서 존경받는 세르히오 발레치(Sergio Valech) 신부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 (The National Commission on Political Detention and Torture)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1973.9.11-1990.3.10간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어 고문 받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 명단을 작성하고 보상조치를 건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고문의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도 정치억압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활동을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변호사, 심리학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등 60명의 각분야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고 2004.8월말까지 인터넷 웹사이트,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피해자 및 친지방문, 인터뷰, 신문스크랩, 피해자의 각종 증명서 수집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공관을 통해 40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사례도 수집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진위성 파악에 신경을 써서 정부기관, 군대, 인권단체, 국제기구의 협조를 얻어 진술의 정확성을 엄격히 확인한 후 동 진술인의 피해자 명단 포함여부를 결정하였다.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약 6만명이 고문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아 파악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35,000명이 정치적 이유로 불법구금 또는 고문당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구금 및 고문사건의 약 67.38%가 쿠데타가 발생한 1973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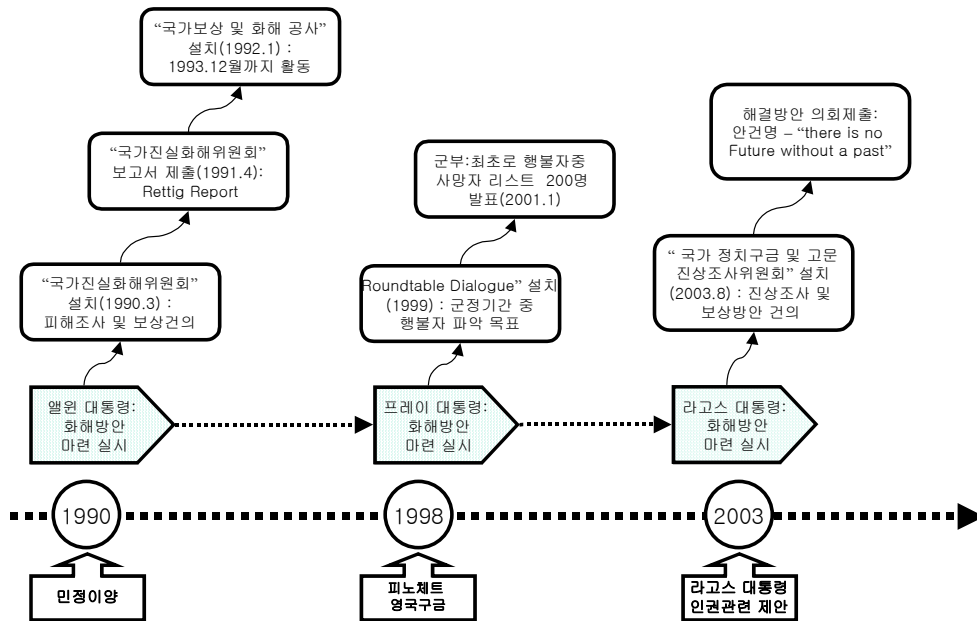
연도별 피해자 비율 (%)



* 전체 피해자수 : 27,255명

1990년 문민정부 출범후 구금 및 고문피해자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자 칠레 군부 수뇌부들은 불편한 심기를 표명하였으며 1991년 엘윈 대통령 정부시 ‘Rettig 위원회’, 1999년 프레이 대통령 정부시 ‘대화협의체’ (Roundtable Dialogue) 등을 통해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표되어 군부가 과거의 인권남용을 시인한 바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인권보고서 발표를 준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라고스 대통령은 자신이 피노체트 군부정권으로부터 불법체포 및 구금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군부정권의 부당한 체포, 구금 및 고문 등 인권유린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상을 정확히 알리고자 하였으며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지향해 나가고자 하였다.

문민정부의 과거사 정리노력



4. 칠레 육군의 사과 성명 발표

후안 에밀리오 체이레(Juan Emilio Cheyre) 육군사령관은 2004.11.5 성명을 발표하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과거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칠레 육군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였으며 금번 결정은 힘든 것이었으나 반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라고스 대통령은 칠레 육군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인권유린행위가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육군이 분명하게 표시해 준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만족과 긍지를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정치권과 일반시민들은 대체로 육군측의 발표에 대해 용감하고 진솔하며 역사적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피노체트 군부정권시의 수뇌부 인사들은 1973-1990년 기간동안 반체제 인사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으며 인권유린은 극소수 불량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서 개인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해공군 및 경찰사령관들도 과거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자행한 군인들이 개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유린의 핵심기관인 육군측의 발표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육군사령관의 성명발표가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발표동기에 의구심을 표하고 인권유린에 연관된 군수뇌부 인사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육군측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칠레군부는 1990년 민정이양 이후에도 군부우위의 1980년 헌법 체제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문민정부가 인권유린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사면법을 내세우며 긴장관계를 조성해 온 것을 고려할 때 칠레 육군사령관의 사과성명은 과거 인권유린 행위의 주모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인정한 것으로 칠레의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5. 정치구금 및 고문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발레치 위원장은 2004.11.10 지난 1년간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라고스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대통령은 3주간 보고서를 검토한 후 11.28 대국민 TV연설을 통해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정부의 견해 및 피해자 보상방안 등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보고서 검토 의견

- ‘정치구금 및 고문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유일한 경험임. 과거 1973-1990년간 발생하였던 정치구금 및 고문행위는 국가기관의 제도적 관행이었던 바,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칠레의 역사적 전통과도 거리가 먼 것임.
- 35,000건의 피해사례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28,000건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⁷⁾, 피해사례를 검토하면서 3가지 점을 생각해 보았음. 첫째, 고문의 잔학성임. 정치구금자의 94%가 고문을 당했으며 3,400명의 여성중 대부분이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음. 둘째, 피해자들이 두려움때문이겠지만 지난 30년간을 어떻게 침묵속에 살아왔는가 하는 점임. 구금 및 고문의 후유증으로 개인의 인생과 가정이 파탄되고 개인사업이 도산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던 바, 이제 침묵은 끝났음. 셋째, 피해 31년만에 보고서가 출간된 의미임. 31년전에 발생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경제적 보상을 하게 되었음.
-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진술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피해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동 진술은 향후 50년간 비밀로 하겠음.
- 이제 정치구금 및 고문 피해자들을 인정함으로써 과거 청산의 장을 마감하게 되었음. 이는 영원히 과거청산에만 매달리자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지향하자는 뜻임. 금번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취지는 과거의 원한과 분열을 재현시키자는 것이 아니며 모든 칠레 국민들의 공존과 단합을 강화하자는 것임.

보상방안

첫째, 제도적 조치

- 국가인권기관(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을 설립, 교육을 통한 인권존중을 증진시키고 현재까지 조사된 방대한 비밀자료들 및 시설들을 관리할 예정임.

7) 추후 재심의를 거쳐 피해자 수는 28,459명으로 확정되었다.

둘째, 상징적·집단적 조치

- 향후 인권유린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조치 등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도덕적 인정을 표시할 상징적·집단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군부에게 어떠한 불명예를 주어서는 안되는 바, 군부는 국가의 영원한 기관이자 모든 칠레인들에게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임.

셋째, 개인에 대한 보상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범죄행위자들로 기소되었었는 바, 시민권리를 전면 복권시켜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킬 예정임.
-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55세이상이며 여성의 경우 평균 60세이상인 바, 심사숙고의 결과 가장 적절한 보상은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종신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보상법안을 의회에 송부할 예정임.

※ 상하원, 2004.12.15 보상법안 승인

- 최저 월 약 190미불의 연금, 의료 및 교육혜택 부여
 - 70세이하는 연 약 2,300미불, 75세이하는 연 약 2,500미불, 75세이상은 연 약 2,700미불의 연금 부여
- 또한 피해자들에게 교육, 보건, 주택분야에서 우대할 예정인 바, 구금 및 고문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대학까지의 학비를 면제해 주고 국립병원 사용시 무료진료 등 의료혜택을 제공하며 고문으로 불구가 된 경우 신체재활을 위한 지원을 보장할 예정임.

6.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반응 및 평가

정치권 여야 모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우익 야당측은 어려운 사안에 도전한 라고스 대통령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동 조치가 칠레 국민의 단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야당측은 칠레가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역사적 진상을 처리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평가하고 칠레가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긍정적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라고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논평하였다.

칠레 공산당은 라고스 대통령의 발표문중 정치구금 및 고문피해가 일어났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음을 지적하고 군부독재시절 외부세력이 강요한 국내 보안법이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군부가 동포의 일부를 조국의 적으로 간주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전직 군사령관 출신 임명직 상원의원들은 보고서 관련 라고스 대통령의 발표가 군부정권시절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한쪽면만 본 ‘반쪽 진상’, ‘일방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보고서 발표는 라고스 대통령의 6년 재임의 대미를 장식하는 역사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금번 조치가 정치구금 및 고문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해 구체적 보상조치를 약속한 점에서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과거청산사례이며 칠레 국민화합 및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칠레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관찰된다.

라고스 대통령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가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군부정권하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 개별책임보다는 군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시인하도록 추진하고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친군부세력이 아옌데 극좌의정부의 실정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묻지 않고 군부정권하의 고문피해 사실만 부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과거사 진상조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화합이 실현되기에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으로 관찰된다.

Ⅲ. 칠레 과거사 정리의 주요 특징

칠레는 1990.3월 17년간의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정이양을 통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문민정부는 16년간 3차례에 걸쳐 여당연립(Concertación) 정부를 유지해 왔으나 군부정권이 1980년 개정된 군부우위의 헌법체제하에서 막강한 군부와 우익야당이 견재하는 가운데 법적·제도적 한계속에서도 인권유린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칠레 문민정부들이 추진해 온 과거사 정리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엘윈, 프레이, 라고스 등 문민정부의 대통령 3명은 인권관련 과거의 경험 및 여타 주변국들의 사례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군부우위의 헌법체제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군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인권유린문제를 다루어갔다.

군부정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준비해 놓은 법적·제도적 틀 속에서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과거사 정리를 위해 가능한 최선을 다하되 이로 인해 군부와 정면충돌함으로써 민주주의 질서의 안정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인권문제에 접근하였다.

아옌데 대통령이후 최초의 사회당 출신 라고스 대통령이 정치구금 및 고문진상조사를 추진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군부는 국가의 영원한 기관이자 모든 칠레인들에게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군부에게 어떠한 불명예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문민정부들은 군부로 하여금 오래된 정치불개입의 전통과 명예를 회복하고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배려하였다.

둘째,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군부우위 헌법체제 속에서 문민우위의 원칙을 관철해 나가면서도 이로 인한 군부와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정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부와 우익야당들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가는 정치전략을 활용하였다.

문민정부들은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반대세력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 소요사태와 정국 위기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군부지지세력을 설득해 나갔다. 문민정부는 군부와 우익야당들과의 꾸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2005.9 군부우위의 헌법을 문민우위의 헌법으로 되돌려 놓는데 성공하였다.

셋째, 문민정부는 과거사 정리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안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각 문민정부의 대통령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자신의 임기내에 진상조사 임무를 종료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넷째,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사면법으로 인해 군부인사를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과거사 정리를 추진하였다. 특히, 문민정부들은 과거사정리로 인한 국민간의 이념적 논쟁을 피하고 군사 쿠데타와 군부정권의 인권유린행위로 인해 칠레 국민이 양분되었다는 인식하에 진상규명을 통해 진리와 정의를 회복하고 양분된 좌·우익 국민들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민화합을 위한 문민정부 대통령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가 국민간 화합보다는 과거상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본 국민여론이 더 많았다.

다섯째, 문민정부는 군부의 인권유린이 30여년전에 발생하여 피해자 및 가족의 대부분이 고령임을 고려, 피해자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물론, 연금, 의료, 주택 등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문민정부들은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생활 수준향상, 교육 및 의료개혁, 국가현대화 계획 추진, 인프라 건설 및 외교강화 등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가운데 과거사 정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였다.

일곱째, 문민정부들은 인권관련 국제협정들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외교를 강화하여 칠레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면서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내적 여건을 조성해 나갔다. 특히, 라고스 대통령은 2004.4 제 3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를 주최하여 칠레의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노력을 홍보하고 2004년 칠레개최 APEC 행사기간중 정치구금 및 고문진상조사를 종결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으며 조사결과를 2004.11 APEC 정상회담직후 발표함으로써 군부와 우익야당의 반발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상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마지막으로, 칠레 집권여당연합은 우익야당에게 정권을 내주어 군부세력이 재등장하지 않도록 정권재창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16년간 3번 연속 정권을 재창출함으로써 과거사 정리를 단계별로 일관성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끝.